

#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치리더십 연구

---

최희식  
국민대학교

2012년 11월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2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치리더십 연구

최희식  
국민대학교

### I. 서론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모델처럼 ‘제도 효과’로써 강한 리더십이 기대되었던 의원내각제는 일본에서는 반대의 현상을 노출했다. 파벌정치로 인해 자민당이 분권화되었고 수상 관저 기능이 정비되지 못하였으며, 관료정치와 족의원 및 자민당 법률 사전심사제가 수상의 리더십을 제약했기 때문이다. 물론 기시 내각의 미일안보 개정, 사토 내각의 오키나와 반환, 다나카 내각의 중일 국교정상화와 같은 정치화된 외교 이슈에 있어서는 강한 리더십이 발휘되었다. 하지만 전후 일본 수상의 정치 리더십은 ‘약한’ 리더십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일반적 견해이다(이토 미쓰토시 2007; 다테바야시 마사히코 2007; 이원덕 2007).

반면,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는 ‘대통령형 수상’이라 불리울 정도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방위비 GNP 1%제한 규정<sup>1</sup>의 철폐, 무기수출 3원칙<sup>2</sup>의 미국에 대한 예외적 적용 등, 국내정치 및 외교 양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었던 내각은 요시다 내각 이후 처음이었다. 수상의 리더십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수 파벌 출신 나카소네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선행연구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나카소네의 개인적 자질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퍼포먼스에 능한 그의 언설 정치, 소수파벌 출신으로써 파벌 정치의 역정에서 일궈낸 뛰어난 권력 감각을 강력한 리더십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심의회 정치(혹은 자문 정치, 브레인 정치), 유력 파벌과의 연대 및 당내 유력자의 포섭 등 파벌정치의 활용, 족의원의 활용, ‘영향력 연합’의 구축 등 나카소네 리더십의 행태적 측면을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요인과 그의 정치 이념이 정합되었음을 강조한다. 그의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국제적 흐름과 더불어 행·재정 개혁이라는 국내적 흐름과 일치함으로써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3</sup>

하지만 본 논문은 그의 리더십이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embedd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이어서, 기존 시스템을 변혁하려는 개혁성을 보이면서도 기존 시스템에 내재화되었기에 기존 체제와의 전면적인 마찰을 회피하고 오히려 기존 체제의 특정 측면을 이용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 리더십은 그 정치적 목표에 따라 개혁 리더십(reform leadership), 혁명 리더십(revolutionary leadership)으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다. 번즈(James MacGregor Burns)는 정치 리더십에 나타나는 지도자(leader)와 추종자(follower) 사이의 관계를 유형화하여,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혁 리더십과 혁명 리더십은 지도자의 카리스마, 지적 자극 등으로 추종자를 일체화시켜 정치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변혁적 리더십에 해당한다(Burns 1979, 169-240).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관계보다는 그 정치적 목표 및 이념에 대한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은 개혁 리더십과 혁명 리더십을 포함하여 체제 변혁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 리더십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은 체제 자체를 개혁하려 하기에 체제 밖에서 공명하는 속성이 있다. 그에 따라 기존 체제와의 전면적 대결이 나타나고 다방면에서의 대립구조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장달중 2007). 하지만 나카소네의 리더십은 후술하듯이, 그가 변혁하려 했던 기존 체제에 뿌리박고, 이를 통해 변혁의 씨앗을 뿌리려는 속성이 강했다. 그가 ‘전후체제’를 부정하면서도 그 전후체제에 의해 배양된 ‘국제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며 이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따라서 그의 리더십은 변혁적이면서도 동시에 체제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은 나지타(Tetsuo Najita)가 일본의 정치리더십을 설명하며 사용했던 ‘유신주의’(restorationism)와는 다르다. 유신주의는 ‘관료주의’(bureaucratism)에 대한 반발로 문화적 이상주의 혹은 복고주의에 바탕을 두고 급진적으로 기존 체제를 변혁하려 했던 이상론에 가깝다(나지타 T. 1992, 19-35). 나카소네의 정치 이념 속에도 전통으로의 복귀 등 이상주의와 복고주의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체제에 대한 이중적 평가로 인해 기존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해체하려는 급진성이 없으며 오히려 기존 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동시에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은 ‘리얼리즘적 이상론’ 혹은 ‘기회주의’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리얼리즘적 이상론은 이상주의적 정책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변혁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조절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이상론을 절대화하는 세력과 그 이상론을 반대하는 세력 모두에게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회주의는 견고한 정책이념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대립적 정책에 대해 양면적 대응을 하는 것이기에 개혁성을 결여하고 있다. 반면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은 체계적인 개혁 아젠다로 개혁성을 전면화시키면서도, 변혁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이중적 평가가 전제되어 있어 개혁 찬성과 반대파 모두를 아우를 수 있거나 그들의 도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된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이 나카소네의 정치적 리더십의 주요한 특징임을 밝히고, 이러한 속성이 강한 실행력을 발휘케 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80년대의 국내외 구조적 요인 및 제도적 요소가 나카소네의 정치 리더십을 강화시켰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조차도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때문에 강한 리더십의 토대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구조와 제도라는 상황적 변수를 권력 자원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리더십이기 때문이다(Samuels 2003, 6).

## II. 전후체제와 나카소네: 정치이념 측면에서의 나카소네 리더십

일본의 ‘전후체제’는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의 두 기둥 위에 구축되었다. 평화헌법은 이른바 ‘알타체제’의 산물로서, 초기 점령정책이었던 비군사화 및 민주화 정책을 보증하는 제도였다. 반면, 극동 안보에 관여하는 대규모 주일 미군의 주둔과 미국의 오키나와 시정권 확보를 전제로 한 ‘비대칭적’ 미일안보조약은 ‘냉



전체제'의 산물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보좌하는 일본의 '기지국가'적 속성을 담보하는 기제였다(남기정 2001; Pyle 2007, 372-381).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55년 체제'로 불리는 보혁대립 구조는 전후체제를 일본 국내정치적으로 내재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Dower 1993, 4-5). 실제, 혁신세력은 평화헌법으로 대변되는 미군정의 비군사화 및 민주화 정책 속에 성장하였으며, 역으로 이러한 평화헌법의 수호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반면 보수세력은 미일안보조약으로 대변되는 '역코스'속에서 재기에 성공했고, 역으로 이러한 반공 혹은 자유주의를 정책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그런 의미에서 55년 체제는 전후체제를 지탱하는 국내정치적 구조였던 것이다.

동시에 전후체제의 정책적 반영물이었던 '요시다 노선'은 미국에의 안보의존, 경무장, 중상주의를 핵심 요소로 정착되어갔다. 요시다 노선은 보혁대립 구도 속에 혁신그룹의 정책적 지향을 흡수하면서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강했다. 즉 요시다 노선은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의 모순성을 양립시키려는 정책적 선택이었다(添谷芳秀 2005, 32-35).

이러한 전후체제는 자민당 우파 세력의 공격 지점이 되었다. 그들에게 전후체제는 강요된 민주주의, 주체성의 상실로 비춰졌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활동은 헌법개정,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에 집중되며 전후체제의 붕괴에 정조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하토야마 그룹과 기시 그룹의 노력은 전후체제의 견고한 벽에 부딪혀 요시다 노선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였다. 전후체제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공고하게 55년 체제에 의해 내재화되어 있어, 이를 개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五百旗頭真 2010, 290-291).

나카소네 또한 헌법개정, 자주국방을 주장하며 전후체제의 해체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나카소네의 정치적 지향성은 평화헌법과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이중적 평가에 기반하고 있었기에 높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카소네는 40-50년대에 평화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주체적 헌법의 제정을 주장하였으나, 60년대에 접어들면서 평화주의와 민주주의 등 평화헌법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며 이를 계승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가 문제시 삼았던 것은 국민의 총체적 의사인 헌법이 미국의 '강요'로 제정되어 일본인의 주체성이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헌법에 의해 부정된 군대 보유와 개전권(開戰權)은 안보를 미국에게 의존케 만들어 일본의 주체성을 훼손한다는 점이었다(何力群 2005, 133-134). 따라서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높았을 경우, 헌법개정은 장기적 목표로 퇴색되어 갔고 평화헌법의 가치를 전면화하면서 혁신세력의 비판을 무마시킬 수 있었다. 반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될 때는 구체적 정책 목표로써 기능하게 된다.

나카소네의 자주국방론 또한 50-60년대에는 주일 미군의 대폭적 축소와 미영동맹 수준의 대등한 동맹 체결을 주 내용으로 하면서 독자적 세력화까지도 연상되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70년대 방위청장의 경험을 통해 주일 미군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미일 안보분담론으로 전환되어 갔다(中島琢磨 2002; 中島琢磨 2005). 이는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이중적 평가 때문이었다. 그는 미일 동맹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으로 일본에게 매우 긴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미국에 일본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일본의 자주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자주국방론은 일본의 역할분담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미일 협조노선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미일 동맹의 상대화' 전략 혹은 일본의 '독자적 세력화'전략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sup>4</sup>

실제 나카소네는 수상이 되기 전 82년 10월 10일 자신의 일기에 패전 후 일본이 걸어온 30년은 "비군사성과 범국민성"을 특징으로 하며, 겐로쿠(元祿) 시대, 쇼쿠호(織豊) 시대, 메이지(明治) 시대와 견줄 정도로 위대한 시대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것이 가능했던 원인을 찾으려 "전후 일본은) 신헌법의 제



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미일안보조약의 세 가지 기초 위에 현대 일본인의 정정당당한 맘과 눈물 중에 건설되었다”고 쓰고 있다(中曾根康弘 1995, 619). 강요된 헌법, 비대칭적 미일동맹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카소네의 정치적 목표는 장기적 측면에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었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요시다 노선으로부터의 탈피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으로 좁아져 갔다. 이는 전후체제를 구성하는 두 가지 기둥이었던 평화헌법과 비대칭적 미일안보조약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요시다 노선의 소극적 외교 및 경제중심 외교로부터 탈피하여 국제문제에 ‘주체적’ 역할을 하는 ‘국제국가 일본’ 노선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그는 요시다 노선을 일국 평화주의에 입각한 소극적 정책에 불과하며 국가의 독립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며 비판하였다(中曾根康弘 2002, 54).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체적 판단 하에 일본의 국력에 상응하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는 미일동맹의 범위를 넘어 독자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자주독립 노선’과는 달랐으며,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주체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했다(岩崎八男 1995, 27-31).

동시에 경제면에서는 기존의 성장 중심 경제운영과 이로 인한 국제적 마찰에 대한 반성으로, 개방형·내수주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국제 경제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일본형’발전지향적 국가(developmental state)로부터 탈각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제 개방성을 확보하고 정부 역할의 축소와 민간 활력의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나카소네의 ‘경제적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이념은 자본이동과 무역을 통제하면서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추구하던 일본식 경제운영이 70년대 석유위기를 기점으로 세계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大獄秀夫 1987, 74-79; Pyle 2007, 458).

나카소네의 정치이념은 민족주의 정책에서도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의 측면을 보였다. 그는 일본의 국가의식과 국민의식 및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일본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전후의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요시다 노선의 물주체적인 ‘경제중심주의’로 일본의 도덕·전통·문화가 황폐해졌다는 나카소네의 비판에도 기반하였다(何力群 2005, 130). 나카소네는 일본 전통문화의 복원을 통해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새로운 일본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실제 나카소네는 85년 7월 자민당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若宮啓文 2006, 179).

전전에는 황국사관이 있었다. 전쟁에 지자 태평양전쟁사관, 즉 동경재판전쟁사관이 나왔다. 일본을 피고로 하여, 연합국의 법률로 문명, 평화, 인도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였다. (중략) 그러나 어느 시기, 일본은 무조건 나쁜다는 자학적 사상이 우리를 엄습했다. 지금도 남아있다. 일본의 나쁜 점을, 전전의 나쁜 점을 쓰면 그것으로 된다는 풍조가 있었다. 나는 반대다. 이겨도 져도 국가이다. 영광과 오욕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국민이다. 오욕을 버리고,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국가이며 국민의 자세다. 이러한 입장으로 일본의 과거 업적을 비판하고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카소네의 전통주의는 일본의 역사적 과오까지 미화하는 우익적 민족주의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자의식 확립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나카소네에 있어 역사적 과오 또한 국가의식 및 국민의식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반면 나카소네는 민주주의, 개성, 국제적 시야 등을 중시하는 국제시민으로써의 국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주창했다. 그는 자문기구인 교육심의회 위원으로 혁신세력이었던 마토에다 모토후미(槇枝元文) 일



교조(일본교직원조합) 前위원장을 위원으로 발탁하여, 향후 ‘유토리 교육’(ゆとり教育)<sup>6</sup>으로 불리는 교육의 시발점을 형성하였다. 이는 국제국가 일본에 걸맞은 국제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국제주의의 발로였다. 그런 의미에서 오타카 히데오(大獄秀夫 1987, 79-89)는 나카소네의 정치이념을 ‘배타적 전통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의 기묘한 결합으로 설명한다. 실제 나카소네는 70년대 자신의 교육이념이 “인격주의, 국민주의, 국제주의, 실력주의, 지방주의의 다섯 가지”(香山健一 1995a)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香山健一 1995a, 71).

야스쿠니 신사 참배 또한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잘 보여준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중국과 한국의 반발에 직면에 참배를 중지하였으며, 역사인식에서 가장 진일보한 견해를 피력하는 등 국제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가령 84년 10월 나카소네 수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침략의 사실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중략) 역시 침략적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吉田裕 1995) 고 발언하며, 전후 수상으로써는 처음으로 중일전쟁의 침략적 측면을 인정하였다. 동시에 84년 9월 전두환 대통령 방일했을 시, 천황은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五百旗頭真 2010)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러한 천황의 발언을 이끌어내는데 나카소네의 역할이 컸다. 비록 ‘유감’ 발언에 머물렀지만, 국가원수인 천황으로 하여금 전후 최초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성 발언을 유도했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吉田裕 1995, 168-170; 五百旗頭真 2010, 213).

전후 일본은 “강화조약의 11조에서 동경재판을 수락하는 형태로 필요 최소한의 전쟁책임을 인정하면서 미국의 동맹자로서 위치를 획득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쟁책임을 사실상 부정하거나 불문에 부치는 등 대외적 자세와 국내적 취급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구별하는”(吉田裕 1995) ‘더블 스탠다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전후 내각 처음으로 나카소네 내각에서 이러한 전쟁책임이 국내적으로 공식화되면서 대외적 표명과 국내적 자세가 일치되어 가기 시작했다(吉田裕 1995, 82, 168-170).

이러한 나카소네의 정치적 지향성을 파일(Kenneth B. Pyle)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Pyle 2007, 453).

(나카소네는) 국가진로를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결정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결정하려 했다. 외교문제에 기회주의적 접근을 하지 말고 일본 자체의 이상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파일의 지적처럼, 나카소네는 일본의 주체적 판단과 일본 자체의 이상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전전(戰前)의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국제사회에 설득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전후 정착되어 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등 ‘국제 자유주의’와 접목해야 했다. 결국 나카소네는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일본인의 정체성을 창출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大獄秀夫 1994, 263).

이러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이념적 결합은 전후체제가 일본의 주체적 판단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 이면서도, 이로 배양된 국제 자유주의적 가치가 전후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불러왔다는 전후체제에 대한 이중적 평가에 기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나카소네의 리더십은 전후체제의 변혁을 추구하는 ‘체제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가 있었지만, 전후체제에 대한 이중적 평가에 따라 전후체제의 긍정적 요소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용적인 리더십의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그의 정치이념은 “경제중심주의적인 요시다 노선과는 궤도를 달리하였다. 그러나 나카소네의 신국제주의 노선은 하토야마나 기시류의 복고적·전통주의적 보수주의와도 달랐다”(박철희 2011, 214). 그런 의미에서 나카소네의 정치 리더십은 전후 체제에 뿌리박 으면서도 이를 부정하는 전후체제에 내재화된(embedded) 변혁적 리더십이었던 것이다.



### III. 정치적 기회구조와 나카소네: 행태적 측면에서의 나카소네 리더십

나카소네가 수상에 취임한 즈음은 70년대 데탕트시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나카-오히라 연합이 70년대 자민당 정치를 지배하면서 다나카파의 영향력은 증가 일로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40일 항쟁’에서 보이듯이 격렬한 파벌항쟁이 발생하여 자민당 정치는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74년 11월 다나카 카쿠에(田中角榮)의 금권정치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민당의 금권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다. 이는 자민당 지지의 하락과 더불어 보혁백중 시대를 초래하여 자민당은 극도로 허약한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이러한 금권정치에 반발하며 일부 의원이 자민당을 탈당하여 76년 신자유클럽을 결성하였고, 76년 총선거와 79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연속으로 참패하였다(이시카와 마쓰미 2006, 169-186). 자민당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혁신세력의 거친 도전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 것인지 새로운 화두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70년대 2차에 걸친 석유위기, 대규모 재정투자와 보조금을 통한 ‘이익유도정치’의 전개로 행·재정 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석유 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기 회복이 늦어지자 일본은 국제발행을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다. 실제 80년 재정 투자 총액은 일본 국내총생산의 11.9%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위해 국제발행도 늘어 다나카 내각 시 4조 엔에 머물렀던 국제발행은 75년에는 8조 5000억 엔, 77년에는 7조 7000억 엔, 79년에는 7조 4000억 엔에 이르렀다. 오히라 내각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세 도입을 제안했지만 79년 10월 총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증세를 통한 재정재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따라서 재정 재건의 중점은 사회복지 체제의 정비, 막대한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세출억제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박철희 2011, 201-202).

대외적으로는 79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신냉전’이 도래하면서, 70년대의 ‘데탕트 외교’로는 대응하기 힘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데탕트 시기, 냉전체제의 완화에 따라 일본은 ‘전방위 외교’를 표방하며 소련, 중국, 북한, 북베트남 등 공산권 국가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양호한 국제관계를 구축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전개했다. 하지만 신냉전으로 미소 대립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일본은 대미 협조주의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적극적 역할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동시에 70년대는 미국과 유럽 경제의 침체로 일본에 대한 개방 압력이 제고되어 무역마찰이 빈번하던 시기였다. 일본은 이제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고, 폐쇄형 무역의존 경제로부터 개방형·내수형 경제로의 전환을 요구받았다. 77년 런던 G7 정상회담에서, 경상수지 흑자국가가 출현하여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이 되어야 한다는 ‘일본-독일 기관차론’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은 연평균 6.7%의 성장, 7억 달러까지 경상수지를 적자화하겠다고 표명하기까지 이르렀다(五百旗頭真 2010, 181).

이렇듯 7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은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으며, 국내 정치경제구조의 재편 압력도 커져갔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은 ‘데탕트 외교’와 ‘이익유도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70년대식 정치경제 운영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70년대 말의 변화된 구조는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이념축으로 체제변혁적 리더십을 표방한 나카소네에게는 위기가 아닌 기회였으며, 권력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그의 정치 이념이 시대적 요구와 상응하였던 것이다. 오히라 내각은 ‘자유진영의 일원’, ‘종합안전보장’, ‘환태평양연대구상’, 소비세 구상 등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 과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그의 죽음과 함께 수포로 돌아갔다. 나카소네는 오히라 내각이 추구하던 정책의 기본 기초를 유지하고, 오히라 수상은 정책조언 그룹을 흡수하며 80년대의 새로운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려 하였다(박철희 2011, 191).

하지만, 소수파별 출신으로 다나카파의 후원으로 수상에 취임한 나카소네는 자신의 리더십이 제한 받았다. 실제, 초기 내각 구성에서 파벌균형적 인사배치를 하면서도 汎다나카파 8명을 입각시키는 등 ‘다나카소네’(田中曾根)내각 혹은 ‘다나카 그림자내각’(角影内閣)이라 비아냥거림을 당했을 정도로 다나카파의 영향력 하에 내각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83년 10월 다나카의 실형선고는 다나카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동시에 파벌의 세대교체 흐름은 소수 파벌 출신의 나카소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오히라 수상의 죽음과 스즈키 수상의 불명예적 사퇴로 오히라 파벌은 그 중심이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로 전환되어갔으며, 후쿠다 파벌 또한 후쿠다의 수상 퇴임 이후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다. 동시에 85년 2월에는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가 중심이 되어 ‘창정회’를 발족하여, 70년대 자민당을 지배하던 다나카파는 다케시타파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세대교체적 상황 속에서 나카소네는 ‘뉴리더’로 불리는 차세대 실력자(다케시타, 아베, 미야자와 등)를 장기간 내각에 입각시켜 운명 공동체를 만들고, 상호 경쟁을 시킴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하였다(이시카와 마쓰미 2006, 196-200).

물론 보혁백중의 정치적 상황은 83년 12월 총선거에서의 패배와 이로 인한 연립정부의 구성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였지만, 나카소네의 당내 리더십 확보와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를 돌파할 수 있었다. 나카소네는 ‘수상 공선제(公選制)’를 주장하며 파벌정치에 의해 약화된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제도개혁을 역설해왔지만, 수상 취임 이후 이러한 주장은 자취를 감췄다. 그는 기존의 파벌정치를 자신의 리더십 강화에 이용하려는 리얼리즘을 택한 것이다.

당인과 파벌로 정치인생을 시작한 그로써는 관료정치 또한 개혁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관료정치에도 도전하지 않고 이를 우회한 전략을 구사했다. 그는 오히라 수상의 ‘심의회 정치’와 ‘브레인 정치’를 원용하면서 관료의 저항을 포위하는 탈로를 모색했다. 퍼포먼스에 능한 정치적 자질과 어울리며 나카소네식 대중정치는 심의회 정치를 통해 그 위력을 발휘했다. 수상의 사적 자문기구 혹은 행정조직법상의 심의회에 나카소네의 정책조언 그룹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나카소네의 정책적 이념을 실체화하고 제언서를 발표했다. 나카소네는 이러한 제언서를 바탕으로 여론을 환기하며 관료를 포위하는 방식을 취했다. 실제, 국영기업의 민영화에서는 스즈키 내각부터 설립된 ‘임시행정조사회’(린초)를 활용하였고, 방위비 GNP 1%제한 규정의 철폐는 84년 12월 ‘평화문제연구회’(수상 사적 자문기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교육개혁의 경우는 ‘문화와 교육에 관한 간담회’(수상 사적 자문기구)의 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채택하는 형태를 취하였다(박철희 2011, 190-192; 이시카와 마쓰미 2006, 198).

이렇듯 관료를 포섭하면서 우회하는 리더십은 수상 관저의 조직체계를 강화하였기에 가능했다. 특히 당내 최대파벌인 다나카파 출신이자 관료정치의 속성을 잘 파악하며 족의원에 대한 영향력이 컸던 고토다 마사하루(後藤田正晴)를 관방장관으로 기용함으로써 리더십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나카소네는 각 성청에서 파견되는 총리비서관에 과장급 인사가 배치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국장 승진 직전의 능력있는 인사가 파견되도록 하여 각 성청의 관료조직을 장악할 수 있었다(信田智人 2004, 131-133). 86년 7월에는 수상 관저의 조직체계를 내정심의실, 외정심의실, 안전보장실, 홍보관실, 정보조사실 등 ‘5실 체제’로 정비하여 수상 관저가 각 성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였다(信田智人 2004, 140-143).

또한 퍼포먼스에 능했던 정치적 자질은 전환기 정치에 조응했다. 특히 그의 퍼포먼스는 외교 영역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에도 충분했다. 일본 정치인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약하다는 일반의 인식을 타파함으로써 나카소네의 리더십을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또한 미국과의 퍼포먼스적 유대관계의 형성(론-야스 관계의 구축)은 국내정치 상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 국내정치적으로는



전술했듯이, 심의회에서 중요한 정치 이슈를 다루게 했고,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나카소네식 대중정치를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전후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TV 등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관료정치를 우회하고자 했던 그의 정치 기법이 잘 들어났다(松田橋和 1995, 761-765).

물론 이러한 리더십은 미국과 유럽의 개방압력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외압’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그의 정치적 이상에 추동력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외압’을 통해 자유화 연합(coalition) 혹은 ‘영향력 연합’을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시켜갔다. 즉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선호하던 대장성, 경단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집단, 자민당 내 자유화에 찬성하던 유력의원,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 여론이 나카소네의 리더십 속에 ‘영향력 연합’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村松岐夫 1987, 23-28).

이렇듯 행태적 측면에서 나카소네 리더십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파벌정치와 관료정치를 배척하기 보다는 이를 이용하는 철저한 리얼리즘적 접근 방법을 취했고, 외압과 국제정치경제구조의 전환 등 구조적 요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동시에 심의회 정치와 퍼포먼스 정치를 통해 중요 정책이슈에 국민 지지를 확보하면서 개혁 반대파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나카소네의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이 보혁대립 속에 개혁성을 확보하면서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83년 12월 총선거에서의 패배는 비록 다나카의 금권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측면이 강했으나, 우파적 속성을 보인 나카소네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였다. 실제 나카소네 수상은 83년 1월 대미 무기 기술 공여를 결정하여 모든 국가에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에 수정을 가했고, 방미 시 불침향모 발언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표명하는 등 기존 외교노선에서 이탈하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카소네는 83년 총선거 패배 이후 행·재정 개혁을 전면내세우며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통해 개혁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보수적 속성 또한 국제주의적 속성으로 상쇄하여 갔다. 실제 나카소네 수상은 84년 1월 ‘전후정치의 총결산’을 주장하며 그 목표로써 “자주, 연대, 창조를 기조로 하는 강인한 문화·복지 국가 만들기이며,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국가 일본에의 전진”임을 천명하며 국제주의적 속성을 전면화했다. 3대 개혁과제로써는 재정개혁, 행정개혁, 교육개혁을 내세웠다. 이중에 교육개혁은 목표로써 ‘가정 및 사회교육의 중시’를 거론함으로써 민족주의적 색채를 표방한 곳도 존재했으나, 그 외에는 개성의 존중 및 교실 밖에서의 실천체험 장려 등 전인적 교육, 교육 선택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간적 교육 양식의 탐구, 국제국가일본에 상응하는 교육의 국제화를 거론하며 국제주의적 속성을 전면화하였다(1984년 2월 6일 중의원 본회의).

이러한 ‘전후 정치의 총결산’노선의 신자유주의적, 국제주의적, 보편주의적 요소는 혁신세력의 비판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요소로 개혁성이 부각되면서 혁신세력의 비판 여지는 좁아져 갔다. 재정 재건이라는 구호는 정책 규범으로서 국민여론에 광범위하게 침투되었고, 이러한 ‘담론정치’속에 혁신세력의 대항은 쉽지 않았던 것이다(미야모토 타로 2011, 127). 동시에 국제주의적, 보편주의적 요소는 혁신세력의 이념과도 상응하는 것으로 비판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이러한 전환은 나카소네에 있어 ‘기회주의적 전환’은 아니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나카소네의 정치이념은 전후체제에 내재되어 있던 변혁적 리더십이어서 높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신자유클럽과의 연립을 통해 정권이 안정화되자 나카소네는 84년 8월에 ‘임시교육심의회’를 조직하여 교육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85년 8월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고, 86년에는



방위비 GNP 1%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전후체제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을 가속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파적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비판이 고조되자, 다시금 국제주의적 요소로 이를 완화시켰다.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교육개혁은 다양성·개성 등 보편주의적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비판을 빚겨나갔으며, 야스쿠니 참배의 경우, ‘국제국가 일본 노선’에 입각해 주변국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다음 해에 참배를 중지하였다. 86년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 문부상의 망언에 대한 신속한 대처 또한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단순한 복고적·전통주의적 우익과는 달리 국제주의 속성이 가미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의 이중적 지향성과 유연성으로 나카소네는 국내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권의 안정도 및 국민 지지율 등을 조망하며,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보수파와 혁신파 양자의 도전을 막아내며 동시에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전후체제에 내재되었던 변혁적 리더십이었기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나카소네는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권력의 자원으로 전환시켜갈 수 있었다.

## IV.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의 성과와 한계

### 1. ‘전후정치의 총결산’의 성과와 한계

전술했듯이, 나카소네의 ‘전후정치 총결산’노선은 재정개혁, 행정개혁, 교육개혁이 핵심 과제였다. 이 중에 행정개혁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나카소네는 스즈키 내각부터 설립된 ‘임시행정조사회’(린초)를 활용하여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83년 3월 린초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자 본격적인 민영화 정책을 실시하여, 84년 8월에는 전매공사를 일본 담배산업회사(JP)로, 12월에는 전전공사(電電公社)를 일본 전신전화회사(NTT)로 민영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86년 10월에 국철공사를 6개 사로 분할 민영화하는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개혁에는 전술했듯이, 심의회 정치, 족의원의 활용, 영향력 연합의 구성 등 나카소네의 리더십이 크게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박철희 2011, 202-205).

이러한 행정개혁은 국채발행을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예를 들어 89년 국채발행액은 2천억 엔으로 8조 엔까지 발행했던 때와 비교하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이는 경제성장과 정부 보유 NTT 주식의 고가 매각으로 정부 세입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채의 존 재정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수 있었다(中川幸次 1995, 399-400; 손열 2003, 126).

동시에 이러한 행정개혁은 뜻하지 않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다. 사회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었으며 전투적 노동조합이었던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내에서 최대 조직력을 자랑하던 공노협(공공기업체노동조합의회)이 민영화로 인해 무력화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재편 통일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아 89년 11월에 동맹(전일본노동총동맹)과 총평이 통합하여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가 탄생했다. 렌고는 총평과는 달리 사회당 지지정책에서 노동조합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영역에 영향력을 미



치려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사회당의 조직적 기반은 약화되었다. 이른바 ‘보수 우위의 시대’의 막이 열린 것이다(박철희 2011, 206; Pempel 1998, 394).

반면, 교육개혁은 정책구상 단계에 머물러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87년 나카소네 자문기구 ‘교육 자문위원회’는 커리큘럼의 자율성 확대 등 교육 자유화를 권고했다. 임기 말이라는 정치적 상황과도 연계되어 정책제언 단계에서 종말을 고했지만, 이러한 정책제언은 90년대에 들어 상당부분 채택되어 나카소네의 교육정책은 ‘유토리 교육’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Pyle 2007, 459-460; 香山健一 1995b, 691-695).

또한 나카소네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오히라 수상의 소비세 구상과 비슷한 매상세(판매세) 도입을 추진했다. 전술했듯이, 행정개혁에 입각한 재정 건전성 확보는 NTT 주식의 고가매도에 입각한 것으로 일회적 성격이 강했다. 동시에 후술하듯 주변국의 압력으로 일본은 내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대규모 내수확대 정책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밖에 방법이 없었다. 이에 나카소네는 87년 ‘세계조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간접세의 도입을 제안하자 이에 바탕을 두고 매상세를 추진했지만, 자민당 내부의 반대는 물론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였다(이시카와 마쓰미 2006, 208; 由井常彦 1995, 520-527).

무엇보다 나카소네 개혁의 공백지대는 정치개혁 분야였다(松田橋和·佐々木芳隆 1995, 780). 83년 10월 다나카의 실형선고과 더불어, 85년 7월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최고재판소는 ‘한 표의 격차’가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 및 의원 정수 조정은 당면 과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이시카와 마쓰미 2006, 203). 하지만 수상공선제 등 정치개혁에 열의를 가지고 있던 나카소네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는 당내 최대파벌인 다나카파에 의존하지 않으면 수상이 될 수 없었던 소수파벌 출신의 한계를 직감한 나카소네의 리얼리즘 때문이었을 것이다.

동시에 금권정치의 배경이 되었던 ‘이익유도정치’는 개혁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더욱 강화되었다.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 내수확대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카소네는 지방정부와 ‘제 2의 재정’으로 불리던 재정투용자의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했다. 나카소네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중앙정부의 공공사업비는 축소되어 갔지만, 지방정부의 공공사업은 확대 일로였다. 실제 84년 ‘마을만들기 특별대책사업’, 86년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실시되면서,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단독 공공사업비는 급격히 증가되었다. 실제 1973년 지방정부의 건설사업비 중 국고보조사업이 33.2%, 지방정부 단독사업이 13.1%였던 것이 85년에는 국가보조사업이 18%, 지방정부 단독사업이 32.4%로 국가보조사업은 줄어든 반면, 지방정부 단독사업이 증가했다. 동시에 중앙정부의 공공사업비는 축소되어 갔지만, 재정투용자를 통한 공공사업비는 85년 3조 6천억 엔에서 90년 5조 4천억 엔으로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익유도정치는 89년 ‘리쿠르트 사건’<sup>8</sup>으로 금권정치의 온상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미야모토 타로 2011, 136-143).

이러한 이익유도정치의 강화현상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도시 중산층을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흡수하면서도,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농촌과 지방의 지지를 유지하려던 이중적 전략의 산물이었다. 이익유도정치가 지방정부 및 재정투용자를 통해 국민 여론과 도시 중산층에게 ‘보이지 않게’ 전개됨으로써 자민당의 새로운 지지기반 확충과 전통적 지지기반의 견고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보수 우위의 시대’를 가져온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듯 나카소네의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이 기존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기존 체제와 ‘타협’하게 만들기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타협은 오래가지 못했다. 90년대 본격적으로 정치개혁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했고, 국가의 부(富)를 지



방과 농촌 등으로 재분배하던 이익유도정치는 재정적자의 가속화 속에서 근본적 개혁대상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 2. '국제국가 일본'노선의 성과와 한계

나카소네의 정치 리더십이 가장 잘 발현된 곳은 다름 아닌 외교 분야였다. 전술했듯이, 나카소네 내각 초기에는 다나카파의 지원 속에 수상이 된 관계로 권력기반이 취약한 편이었으며, 자신의 이상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83년 10월 다나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전후정치의 총결산'의 슬로건이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 준다. 하지만 나카소네의 적극적이며 퍼포먼스적 외교형태는 수상 취임 직후 바로 나타났다. 외교 영역은 국내 정치의 제약 요인에서 일정 정도 자유로운 영역이었기 때문이다(五百旗頭真 2010, 201).

먼저, 나카소네 수상은 스즈키 내각에서 냉각되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주력했다. 나카소네 수상은 취임 직후, 수입 검사절차의 개선 등 시장개방 정책을 발표하고, 대미 무기기술공여를 각의결정하였다. 대미 무기기술공여는 무기수출 및 이와 연관된 기술의 공여를 실질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미국에 한에서만 무효화시킨 것으로 그 의미는 컸다. 동시에 83년 국방예산을 6.55% 증액하였다. 이러한 선물을 가지고 나카소네는 83년 1월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미일운명공동체', '불침항모' 등 지금까지 터부시되었던 발언을 하면서 국제정치경제 구조에 있어 질서 유지자의 역할을 미일협조 하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어필하며, 미국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후 '론야스'로 불리는 양국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관계를 통해 미일관계는 더욱 긴밀화되었다. 86년 9월에는 전략방위구상(SDI) 연구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각의 결정하였고, 같은 해 방위비 GNP 1%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 87년 10월에는 차세대 전투기(FSX)의 미일 공동개발을 결정하는 등 미일관계는 군사적 측면까지 더욱 긴밀해졌다(高浜賛 1995, 157-163).

또한 나카소네는 “겸허하게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대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다른 G6 국가들도 일본이 아시아의 대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파하며(中曾根康弘 1996, 369),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를 전개했다. 나카소네는 83년 1월 방미 전에 해외 첫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하여 40억 달러의 경제원조 문제를 해결한 후, 4월에는 아세안을 방문하여 광공업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50% 확대하는 등 아세안을 향한 시장개방계획과 300억 엔 규모의 엔차관 제공을 약속했다. 84년 3월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4700억 엔 규모의 경제원조를 표명했다. 또한 이미 살펴보았듯이, 84년 전두환 방일 시 친황의 과거사 발언을 이끌어내었고, 중일전쟁에 대한 전향적 역사인식을 표명하면서, 역사문제라는 아시아 외교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노력했다(長谷川和年 1995, 214-218).

동시에 나카소네는 다자간 외교에도 적극적이었다. 나카소네는 “아시아와 일본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던 G7 정상회담을 중요한 무대로 생각했다(中曾根康弘 2002, 68). 83년 윌리엄즈버그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카소네는 한국과 아세안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요구사항을 청취한 후, 회의에서 이를 전하는 형태로 일본이 아시아의 대표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또한 소련의 SS-20 미사일 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본의 적극성을 어필했다(五百旗頭真 2010, 203-204).

동시에 85년 G5 재무상·중앙은행총재 회담에서 달러를 대폭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플라자 합의에 합의하였다. 이는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는 일본의 환율 절하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보호 무역주의 흐름을 예방하려던 국제사회의 정책협조였다. 이에 앞서, 일본은 대규모 시장개방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다. 수출자율규제, 시장분



야별 협의(MOSS), 관세인하조치(액션플랜), 미일 반도체 협상 등이 이러한 시도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결국 일본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문제에 대한 국제공조정책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黒田眞 1995, 591-594).

동시에 나카소네는 마에가와 하루오(前川春雄, 전 일본은행총재)를 좌장으로 하는 ‘국제협조를 위한 경제구조조정 연구회’를 조직하여 개방형·내수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였다. 86년 4월 발표된 제안서, 이른바 ‘마에가와 리포트’는 경상수지 적자 삭감을 위한 내수확대, 수출의존형 산업구조의 개편, 시장개방의 개선, 금융의 자유화 등을 제안했다. 위 보고서에 기반하여 나카소네 수상은 TV에 출연하여 “국민 1인당 100달러의 외국제품을 사자”며 호소하는 등 일본 경제구조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87년 4월에는 5조 엔 규모의 내수확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기존체제의 두터운 벽에 부딪히며 실질적 성과는 보이지 못했지만, 나카소네의 외교적 퍼포먼스가 가미되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는 있었다(五百旗頭眞 2010, 211).

이렇듯 나카소네의 ‘국제국가 일본’노선은 미일 관계를 기축으로 국제정치경제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미했다. 동시에 적극적 아시아 외교를 통해 일본이 아시아의 정치적 대표임을 각인시키고, 이러한 아시아 외교의 성과를 통해 국제사회에 있어 일본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얼굴을 보인 일본’(初めて顔を持って日本)이라는 평가는 이러한 국제국가 일본 노선의 상징적인 성과일 것이다(松田橋和·佐々木芳隆 1995, 806).

하지만 그의 ‘국제국가 일본’노선은 아시아 외교에서 가장 취약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역사 인식 문제에서 진일보한 견해를 보였지만, 85년 야스쿠니 참배는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와 아시아 외교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물론 그는 다음 해 참배를 중지하였지만, ‘겉으로만 사죄하는 일본’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비록 나카소네와는 무관하지만, 86년 후지오 문부상의 망언, 87년 중국인 학생기숙사(光華寮)의 소유권이 대만정부에 있다는 오사가 고등재판소의 판결은 아시아 외교에 있어 역사문제를 부각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五百旗頭眞 2010, 213-214).

나카소네의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이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교묘한 결합으로 유연성을 확보시켜 주었지만, 대외 관계, 특히 아시아 외교에서는 오히려 모순성을 드러내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면서 아시아 외교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86년 9월 “미국은 흑인, 푸에르토리코인, 멕시코인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평균적으로 보면 (지적수준은 매우) 낮다”는 발언이 문제가 되어 미국에 사죄했던 것 또한 그의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 속에 민족주의와 국제주의가 ‘일본 국가’를 매개로 융합됨으로써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 전쟁 피해국가에 대한 배려가 취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五百旗頭眞 2010, 214-215).

동시에 나카소네의 ‘국제국가 일본’은 요시다 노선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하며, 무기수 3원칙의 미국에 대한 예외 적용, 방위비 GNP 1%제한 규정의 철폐 등에 있어 성과를 보였지만, 자위대의 평화유지 활동에의 참가에 있어서는 실패를 맞보았다. 87년 9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카소네 수상은 페르시아만의 지뢰 제거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약속했다. 하지만 해상자위대의 귀해정 파견은 여론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기각하고, 경제협력 방식 등 비군사적 방법으로 대처할 것을 결정하였다(佐々淳行 1995, 320-321). 나카소네의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이 평화헌법으로 대변되는 비군사적 국제협력이라는 가치를 긍정하면서도 ‘불침항모’와 같은 군사적 역할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한계를 초래한 것이다.



## V. 결론: 나카소네 정치의 유산

나카소네의 리더십은 그가 변혁하려 했던 ‘전후 체제’에 뿌리박고, 이를 통해 변혁의 씨앗을 뿌리려는 속성이 강했다. 그가 전후체제를 부정하면서도 그 전후체제에 의해 배양된 ‘국제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하며 이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embedd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기존 시스템을 변혁하려는 개혁성을 보이면서도 기존 시스템에 내재되었기에 기존 체제와의 전면적인 마찰을 회피하고 오히려 기존 체제의 특정 측면을 이용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동시에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은 체계적인 개혁 아젠다로 개혁성을 전면화시키면서도, 변혁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이중적 평가가 전제되어 있어 개혁 찬성과 반대파 모두를 아우를 수 있거나, 그들의 도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그러한 유연성이 모순성으로 발현되기도 했다. 이는 야스쿠니 참배 등으로 악화된 아시아 외교에서 극명하게 들어났다. 나카소네는 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교묘한 결합을 꾀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겉으로만 사죄하는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켜 아시아 외교의 걸림돌이 될 뿐이었다. 페르시아만 국제평화유지 활동에의 참가실패 또한 평화헌법의 비군사적 국제공헌 이념을 긍정하면서도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던 나카소네의 이중성이 모순성으로 나타난 중요한 예일 것이다.

동시에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의 유연성은 타협으로도 나타났다. 수상 공선제 등 강력한 정치개혁을 주장했음에도, 소수파별 출신으로써 파벌 정치를 개혁하기보다 이용하려 했으며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정면 대치하는 공공사업비를 지방정부와 재정투융자라는 ‘보이지 않는 방식’을 통해 증액시켰던 것은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농촌과 지방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러한 나카소네의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 때문에 소수파별 출신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이 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강한 실행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나카소네의 리더십은 자민당 주류 보수주의자에게 성공적 리더십으로 평가받으며, 이후 다양한 정치가들에 의해 모방되어 갔다. 그의 정치적 지향 또한 90년대 ‘보통국가론’, 신자유주의 개혁론, 정치제도 개혁론으로 계승되어 갔다. 그런 의미에서 50-60년대가 ‘요시다 없는 요시다 노선의 정착’이었던 처럼(五百旗頭真 2010, 291), 90년대는 ‘나카소네 없는 나카소네 노선의 정착’과정으로 위치설정 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이후의 보수 정치가는 나카소네 정권 시기 실패했던 정치개혁, 자위대 해외파병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다. 파일(Kenneth B. Pyle)은 그런 의미에서 “그들(90년대 정치가)은 나카소네의 노력이 실패했던 곳에서 시작할 참이었다. 그들 가운데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가 단연 두드러졌다”(Pyle 2007, 579)고 말하고 있다.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 PKO 활동을 포함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는 ‘보통국가’라는 슬로건 하에 오자와 이치로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던 것이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는 관저 기능 강화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창출하려했던 나카소네의 이념을 현실화하여, 성청 통합 등 행정개혁을 통해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나카소네 리더십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평가받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는 ‘구조개혁’을 표방하며 일본 경제의 전면적 제도수정을 추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전후체제 탈각’을 표방하며 나카소네가 그토록 열망하던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인정을 핵심과제로 내걸었다.



이처럼 나카소네는 탈냉전 이후 일본 정치의 ‘원류’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체제에 내재화되면서도 이를 변혁하고자 했던 나카소네의 정치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탈냉전 이후 일본 정치의 지향성과 그 한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함의성을 제공할 것이다. ■





## 주(註)

- <sup>1</sup> 71년 11월 미키 내각에서 각의 결정된 것으로, 방위비를 GNP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 <sup>2</sup> 67년 사토 내각 시에 공산국가, UN 결의 등에 의해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의 당사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 결정이다. 여기에 더해 76년 미키 내각에서, 1) 무기수출금지 지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헌법 취지에 따라 무기수출을 신중히 한다, 2) 무기관련 설비의 수출 또한 무기 수출에 해당한다는 원칙이 더해져, 실질적으로 모든 지역에 대한 무기수출 및 이와 연관된 기술·설비의 수출이 금지되었다.
- <sup>3</sup> 나카소네의 강력한 리더십을 세 가지 중 하나로만 설명하는 연구는 없다. 대개의 경우, 세 가지의 복합성을 강조한다. 大獄秀夫(1987; 1994), 村松岐夫(1987, 15-16), 内田健三(1989, 118-152), 松田橋和(1995), 草野厚(2001, 434-443), 이시카와 마쓰미(2006, 194-206), Pyle(2007, 452-455), 北岡伸一(2008, 234-237), 박철희(2011, 188-192) 등을 참조.
- <sup>4</sup> 70년대 나카소네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미일 안보협력의 상호성에 대해서는 佐道明広(2003, 229-238)를 참조. 그의 자주국방론 내에 잠재해 있는 미국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何力群(2005, 127)를 참조.
- <sup>5</sup> 그런 의미에서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의 뒤틀림을 해소하고자 했던 '전후 리얼리즘'으로 나카소네를 파악한 添谷芳秀(2005, 134-146)의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sup>6</sup> 2002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교육으로, 암기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인적인 교육을 강조하며, 주 5일 교육 등 전체 수업시간의 삭감, 절대평가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유 교육'을 지칭한다.
- <sup>7</sup> 79년 10월 중의원 선거 패배 이후, 11월 오히라 수상 지명까지의 자민당 분열사태를 지칭한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 오히라 수상의 사퇴를 요구하는 후쿠다파를 중심으로 하는 비주류파와 다나카파와 오히라파 등 주류파 사이의 파벌항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분당 등의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다나카-오히라 연합에 대한 비주류파의 반발이라는 측면이 컸다.
- <sup>8</sup> 신흥기업이었던 리쿠르트사가 민간주도형 도시개발사업과 민영화된 NTT의 회선 재판매사업 등을 둘러싸고 정계, 재계, 관계의 주요 인물들에게 미공개주식을 나눠준 사건으로, 나카소네 내각 시의 '민활사업' 및 민영화된 NTT가 무대가 되었다는 면에서 나카소네 개혁의 부산물 성격도 존재하였다.



## 참고문헌

- 나지타, T. 박영재 역. 1992. 《근대일본사: 정치항쟁과 지적 긴장》. 서울: 역민사.
- 남기정. 2001.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평화연구〉 9, 1.
- 다테바야시 마사히코. 2007. “정권 정당의 조직적 특징.” 《한일정치사회의 비교분석》. 장달중 외 편. 서울: 아연출판부.
- 미야모토 타로. 임성근 역. 2011. 《복지정치: 일본의 생활보장과 민주주의》. 서울: 논형.
- 박철희. 2011.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 서울대출판부.
- 손열. 2003. 《일본 성장과 위기의 정치경제학》. 서울: 나남출판.
- 이시카와 마쓰미. 박정진 역. 2006. 《일본 전후정치사: 일본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전개》. 서울: 후마니타스.
- 이원덕. 2007. “일본 대외정책의 구조 및 기본성격.” 《일본정치론》. 현대일본학회 편. 서울: 논형.
- 이토 미쓰토시. 2007.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 《한일정치사회의 비교분석》. 장달중 외 편. 서울: 아연출판부.
- 장달중. 2007.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변화: 비교적 시각에서 본 한국과 일본의 정치리더십.” 《한일정치사회의 비교분석》. 장달중 외 편. 서울: 아연출판부.
- Burns, J. M. 1979.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Dower, John. 1993. “Peace and Democracy in Two Systems: External Policy and Internal Conflict.” In *Postwar Japan as History*, ed. Andrew Gord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Pempel, T. J. 최은봉 역. 1998. *Regime Shif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현대 일본의 체제이행》. 서울: 을유문화사.
- Pyle, Kenneth B. 2007. *Japan Rising: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New York: Public Affairs. 2008.
- Pyle, Kenneth B. 이종삼 역. 2007. 《강대국 일본의 부활》. 서울: 한울.
- Samuels, Richard. J. 2003. *Machiavelli's Childre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村松岐夫. 1987. “中曾根政権の政策と政治.” 〈レヴェイアサン〉, 秋.
- 大獄秀夫. 1987. “中曾根政治のイデオロギーとその国内政治的背景.” 〈レヴェイアサン〉, 秋.
- 内田健三. 1989. 《現代日本の保守政治》. 東京: 岩波書店.
- 大獄秀夫. 1994. 《自由主義的改革の時代》. 東京: 中央公論社.
- 吉田裕. 1995. 《日本人の戦争観》. 東京: 岩波書店.
- 中曾根康弘. 1995. “官邸日記.” 《中曾根内閣史—資料》. 世界平和研究所 編. 東京: 中央公論.
- 由非常彦. 1995. “税制改革”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世界平和研究所 編. 東京: 丸の内出版.
- 長谷川和年. 1995. “中曾根外交.”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世界平和研究所 編. 東京: 丸の内出版.
- 中川幸次. 1995. “増税なき財政再建.”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世界平和研究所 編. 東京: 丸の内出版.
- 黒田眞. 1995. “対米摩擦と市場開放.”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世界平和研究所 編. 東京: 丸の内出版.
- 佐々淳行. 1995. “中曾根内閣と国の危機管理.”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世界平和研究所 編. 東京: 丸の内出版.



- 香山健一. 1995a. “中曾根内閣の歴史的役割.”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世界平和研究所 編. 東京: 丸の内出版.
- 高浜賛. 1995. “国際社会における中曾根内閣.”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世界平和研究所 編. 東京: 丸の内出版.
- 松田橋和. 1995. “新しい政権システムの芽生え.”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世界平和研究所 編. 東京: 丸の内出版.
- 松田橋和・佐々木芳隆. 1995. “新時代への政策提起.”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世界平和研究所 編. 東京: 丸の内出版.
- 岩崎八男. 1995. “戦後政治の総決算: 55年体制改革への始動.”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世界平和研究所 編. 東京: 丸の内出版.
- 香山健一. 1995b. “21世紀のための教育改革: 臨教審の設置と文教行政の規制緩和.”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世界平和研究所 編. 東京: 丸の内出版.
- 中曾根康弘. 1996. 《天地有情》. 東京: 文芸春秋.
- 草野厚. 2001. “中曾根康弘: 大統領首相の面目.” 《戦後日本の宰相たち》. 渡邊昭夫 編. 東京: 中央公論新社.
- 中島琢磨. 2002. “中曾根康弘防衛庁長官の安全保障構想.” 〈九大法学〉 84, 107-160.
- 中曾根康弘. 2002. “中曾根康弘: 自立と世界外交を求めて.” 〈国際問題〉 1月.
- 佐道明広. 2003. 《戦後日本の防衛と政治》. 東京: 吉川弘文館.
- 信田智人. 2004. 《官邸外交: 政治リーダーシップの行方》. 東京: 朝日新聞社.
- 添谷芳秀. 2005. 《日本のミドルパワー外交》. 東京: 筑摩書房.
- 何力群. 2005. “日本政治の転換点: 一九七〇年代の中曾根康弘.” 〈国際公共政策研究〉 15, 1.
- 中島琢磨. 2005. “戦後日本の自主防衛論: 中曾根康弘の防衛論を中心として.” 〈法政研究〉 71, 4.
- 若宮啓文. 2006. 《和解とナショナリズム》. 東京: 朝日新聞社.
- 北岡伸一. 2008. 《自民党: 政権党の38年》. 東京: 中央公論新社.
- 五百旗頭真. 2010. 《戦後日本外交史》. 東京: 有斐閣.



## 필자약력

최희식\_국민대 국제학부 조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저술로는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 脱植民地化編(공저)》, 《박정희 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공저)》, “일본에서의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개념 형성 과정 연구,” “일본 분점국회의 교착상태에서 본 양원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대 일본의 아시아 외교전략: 내재적 접근에서 외재적 접근으로,” “전후 한일관계의 구도와 민주당 정부하의 한일관계.” 등이 있다.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 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mailto:hjkim@eai.or.kr)  
김양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mailto:ygkim@eai.or.kr)

